

기획 ▶5면

700MHz 주파수, 누가 더 절실할까

방송 기술 ▶6면

BIRTV 2014, 가능성이 현실되다

오피니언 ▶7면

주파수 배치와 지상파 UHD, 정부가 답해야 할 것들



지상파 UHD 논란, 시간끌기용?

700MHz 대역 주파수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지상파 DTV 분산 중계기 논란이 시간끌기용 술책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월 19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한국IT리더스포럼 강연에서 나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 UHD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들은 바 있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에 쓰던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이 말한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하는 방법'은 새로운 신기술이 아닌 이전부터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검토해 온 기술이고, '기술 발전으로 기존 주파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내용 역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민행복 700플랜>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문제는 일부 언론들이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ETRI의 지상파 DTV 분산 중계 기술을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보도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없이도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이다. 본지의 조사 결과 일부 언론들이 최 위원장의 발언도 누앙스를 미묘하게 왜곡했으며,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없이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도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상파 디지털 전송 방식은 미국식인 ATSC 방식이다. 유럽식인 OFDM 방식은 다수 캐리어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단일주파수망(SFN)' 구성이 가능하지만 미국식인 ATSC 방식은 단일 캐리어 방식으로 SFN 구성이 불가능하다. 다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중주파수망(MFN)'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식인 ATSC 방식은 MFN으로 중계기에서 F1의 주파수를 받으면 F2라는 주파수로 변환해 전파를 쏘아야 혼선이 없는데, 유럽식인 OFDM 방식은 SFN으로 중계기에서 F1의 주파수를 받아 그대로 F1의 주파수로 전파를 쏘아도 혼선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파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SFN 구성이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ETRI가 2009년 개발한 지상파 DTV 분산 중계기를 도입하면 미국식인 ATSC 방식에서도 SFN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파수를 효율화해 기존 주파수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ETRI와 일부 언론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ETRI의 지상파 DTV 분산 중계기를 도입해도 기존 주파수로 지상파 UHD 방송을 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ATSC 방식에서 SF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ghost 간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ghost 간섭은 정상적

으로 수신되는 상 이외에 유령과 같이 희미한 상이 여러 겹 겹쳐 TV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TV의 ghost 특성을 감안하면 ATSC SFN 구성이 가능한 커버리지는 약 3~4Km 정도 수준이다. 물론 최근 기술 발전으로 ghost 처리 능력이 높은 TV들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 TV 수신기와 혼선 문제도 있어 완벽한 ATSC SFN 망 구축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TSC SFN을 구성한다면 상당수 가구에서 TV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미국 일부 지역에서 ATSC SFN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보도 내용과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 3월 기준으로 미국 8개주 14개 방송국에서 SFN을 구축해 운영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방송국의 출력에 확인한 결과 수십 km 거리에서 대출력으로 송신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처럼 평야나 사막지대가 아닌 산악지형 위주인 우리나라에서 소출력이 아닌 대출력으로 송신해야 하는 지상파 UHD 방송의 경우 기술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분산 중계 기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분산 송신 기술의 경우도 표준 변경 문제가 있고, 운용 비용도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분산 송신 기술의 경우 현재 표준 채택을 위해 제안 중인 기술로 아직 채택 여부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표준으로 채택이 되더라도 현재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과정과 같은 과정을 또 한 번 겪어야 한다. ▶3면에 계속

백선하 baek@kobeta.com

추석 연휴 관계로 195호는 9월 24일 발행됩니다.

취임사 미래 방송 기술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제24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이후삼입니다. 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연합회원님들께 신임 연합회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 1987년 대한민국 방송 기술 발전과 올바른 방송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방송 기술인들이 모여 출범한 단체로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방송 기술인 교육 사업과 KOBA, 월드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송 기술인들의 단합과 위상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체의 연합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최근 방송 환경은 인터넷, 뉴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뉴미디어 단말의 등장과 플랫폼, 응용 기술이 난무하면서 방송 기술의 영역 역시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 정책은 날이 갈수록 유료 방송과 통신사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2일 미래부 산하 민간협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총회에서 34건의 안건 중 유일하게 UHD 지상파 표준안만이 부결되는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통신 재벌사들이 700MHz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라고 보이며 이를 방치하고 묵과한 정부 정책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신에 배정된 40MHz 폭은 가능한 건드리지 않고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방송 환경은 지상파에 절대 유리하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연합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통융합의 시대를 지나,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재창조되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방송을 벗어난 미디어 플랫폼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방송 기술인들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버리고, 디지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의식 변화를 통해,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방

송 기술인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제24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러한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방송 정책 현안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부와 학계 및 외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무료 보편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을 높이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과 UHD-TV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방송 기술인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의 연합회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 방송 기술인들이 조금 더 땀땀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합회가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연합회가 주최하는 KOBA 국제 방송 기술 콘퍼런스와 가을 디지털 방송 콘퍼런스를 통해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와 정부 기관에 종합적인 의견 제시 등 우리 방송 기술인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셋째, 방송 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현실점에서 연합회는 '방송과기술' 및 '방송기술저널', '방송기술교육원'을 통해 미래 지상파 방송의 비전을 제시하고 KOBA 콘퍼런스와 월드 포럼을 글로벌화해 방송 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결된 우리 방송 기술인의 힘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해결하지 못할 사항은 없습니다.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여, 변화하는 기술과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연합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전국의 연합회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며 어렵고 고단한 일들도 연합회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빌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연합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합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24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기술인상 선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제23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분기별 방송기술인상을 제정했습니다.

2014년 2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남호(EBS)

박기성(CBS)

백종선(KBS)

종합편집실(OBS)

김상동(MBC)

박정기(SBS)

이정환(tbs)

황동규(TBN)

김창균(KBS)

박창홍(EBS)

정철호(JTV)

KBS 이사장 후보에 이인호 교수 내정

정치권과 KBS 내부 반발 거세



8월 27일 사표를 제출한 이길영 KBS 이사회 이사장 후임 이사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78·여)가 추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회 신임 이사로 이 명예교수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측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퇴장했지만 최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측 상임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인사 7명, 야당 추천 인사 4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통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KBS 이사회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의 호선으로 추천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KBS 내부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문창극 총리 후보의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문창극 총리 후보 강연 보도 직후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문 후보자의 강연을 보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강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 후보자를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은 또 다시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됐다”며 정권이 방송 장악의 시도를 보인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역시 “제2의 문창극이 KBS에 들어오는 셈”이라며 이 후보자의 편향된 역사 인식을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원로 사학자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핀란드와 러시아 주재 대사를 등을 지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고화질 DMB? 정부 지원 절실

“지상파 DMB 한계 … 시청자가 원하는 고화질 서비스 못해”

지상파 DMB로 생생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화면 상단에 표시된 출연 국가명과 점수도 선명하게 보이고, 양팀 선수 등번호와 얼굴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화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조만간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과 새로운 송수신 정합 표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고화질 DMB 제공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DMB 6개 방송사 협의체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이하 지특위)는 고효율 비디오 코딩(HEVC) 기술을 적용한 고화질 DMB 기술을 개발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HEVC는 최신 영상 압축 기술 중 하나로 주로 초고화질(UHD) 방송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비디오 코덱’으로 많은 데이터량을 효율적으로 줄여준다. 예를 들어 HEVC 개발 전에 사용되던 기존의 H.264 비디오 코덱이 1GB급 영화 한 편을 100배 압축해 10MB로 줄였다면, HEVC 비디오 코덱은 200배 압축해 5MB로 줄일 수 있다. 데이터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상파 DMB에도 고화질의 영상 전송이 가능해진다.

엄민형 지특위 사무국장은 “지상파 DMB 방송 시스템에 HEVC 기술을 적용해 고화질 이동방송이 가능하도록 KBS

기술연구소, 카이미디어, 옴니텔이 공동으로 순수 국산 기술을 개발했다”며 고화질 DMB 시대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8월 29일에는 경주시에서 열리는 봉황대 뮤직스퀘어 <봉화대의 여름연가>를 대상으로 실험방송을 진행해 경주 지역 주민들은 일반 스마트폰에서 ‘소출력 DMB’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었다.



사실 이 같은 고화질 DMB 서비스는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대접을 받았던 지상파 DMB가 무료 방송 서비스라는 수익 구조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계속 내리막길을 걷자 업계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준비한 것이다.

지난 2011년 236억 원의 광고 매출을 기록했던 지상파 DMB가 지난해에는 80억 원 수준의 광고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쳐 3년 사이 광고 매출이 약 3분의 1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상파 DMB의 매출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N-스크린 서비스의 등장과 저화질 문제였다”면서 “화질 부분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만큼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지상파

DMB 특유의 장점을 염두에 둔다면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광고주협회의 조사 결과도 지상파 DMB의 잠재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때 지상파 DMB를 이용한다. 이는 곧 지상파 DMB가 플랫폼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도 무료 보편적 플랫폼인 지상파 DMB를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티빙이나 올레TV, POCQ(폭) 등의 N-스크린 서비스는 모두 유료형 서비스라는 단점이 있지만 지상파 DMB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무료 보편의 서비스”라면서 지상파 DMB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로 지상파 DMB가 재도약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청자들의 원하는 화질의 DM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주파수 △새로운 송수신 정합 표준 △단말기 제조업체와의 기술적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 DMB 송수신 정합 표준은 ‘쿼터 비디오 그래픽스 어레이(QVGA, 320×240)’ 해상도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SD급 640×480 해상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면에 계속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파, JTBC 상대로 소송 제기

6·4지방선거 출구 조사 무단 사용 지적재산권 침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지상파방송 3사는 8월 28일 JTBC가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는 오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이자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월 4일 JTBC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대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 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 조사를 반영한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상파방송 3사는 각 지역의 1위 그리고 일부 지역의 2위만 공개했을 뿐 득표율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JTBC에 방송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지만 JTBC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라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JTBC가 지상파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노출한 시간이 지상파방송보다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협회는 “출구 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놓고 그래픽 등 모든 방송

포맷을 준비해둔 것”이라며 “JTBC가 지상파방송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확보해 미리 내보낸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을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JTBC는 “지상파방송 3사의 출구 조사를 인용 보도했을 뿐 먼저 보도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지상파방송 3사는 “이번 출구 조사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직접비만 24억 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지상파방송 3사의 중요 자료를 불상의 경로로 사전에 취득해 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행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출구 조사 인용 보도 관행에도 중요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 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 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UHD, 앞서나가는 ‘일본’ … 제자리걸음 ‘한국’

일본이 차세대 방송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UHD 방송용 주파수 확보는커녕 아직 지상파 UHD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표준도 없는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NHK는 9월 12일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송 박람회(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이하 IBC) 2014’에서 초당 120 프레임을 처리하는 기술을 포함한 8K급 ‘슈퍼 하이비전 TV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8K급 슈퍼 하이비전 기술은 현재 시장에 가장 많이 보급된 HD 및 22.2 채널 오디오 보다 16배, 일반적인 UHD로 불리는 4K급 보다 4배 정도 해상도가 높은 기술을 말한다.

NHK가 올해 선보이는 8K 신기술은 단·대·단 고속 프레임 처리 시스템으로 카메라·비디오 처리·디스플레이 등 모든 제품에서 초당 120 순차 프레임으로 8K 해상도(7680×4320 픽셀)를 구현한다. 고속 프레임 처리 시스템은 높은 영상 해상도뿐만 아니라 3개 층으로 된 22개 오디오 채널과 2개의 서브 우퍼(초저음부) 채널을 포함한 3D 서라운드 시스템이 보완되어 최상의 음향을 제공한다.

NHK 관계자는 “8K 슈퍼 하이비전 기술은 획기적인 기술로 단·대·단 고속 프레임 처리 시스템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장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특

NHK, ‘IBC 2014’서 8K급 고속 프레임 처리 시스템 선보여

히 스포츠와 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콘텐츠에서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기술 외에도 현재 일본은 8K 구현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키며 국제 규격으로 승인받는 등 모든 기술 개발을 8K 상용화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NHK 역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8K 방송을 시작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 시험 방송 실시 예정 등 8K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앞서 나가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UHD 방송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8K 실험 중계 방송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8K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직 일반적인 UHD인 4K에 대한 교통정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 유료 방송 UHD 상용화라는 달콤한 미몽에만 빠져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UHD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유료 방송만으로 부족하다. NHK 중심으로 4K에 이어 8K급 관련 기술까지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현재 UHD 시장에서 4K는 물론이고 8K에서도 일본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방송 콘텐츠의 80% 이상을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유료 방송 중심의 UHD 정책을 추진한 정부 정책에 있다.

일각에선 UHD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도 UHD 상용화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지상파 UHD 방송은 시기상조라는 단일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세계 각국은 지상파 UHD 실험 방송을 성공리에 끝내며 지상파 UHD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위원회도 얼마 전 오는 2016년 지상파방송을 UHD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프랑스에서, 2020년 일본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한 뒤 지상파 UHD 방송을 부리나케 준비해봤자 소용 없다. 다른 나라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상파 UHD 상용화로 UHD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UHD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설 자리를 마련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통위 헛발질, 종편 봐주기 판결 불러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3개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종편 봐주기’ 판결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방통위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정형식 수석부장판사) TV조선, 채널A, MBN 등 방송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

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거 위반 행위인 재방송 비율 준수 부분은 현재 방송사들이 산술 법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준수 부분이 무효이므로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

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판단하면서도 ‘이행 불가능한 시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면서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지킬 것, 계속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시정명령 처분 당시 이미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 이후 4달 동안 개선의 모습이 있었다면 방통위는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재방송 비율은 높고, 개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는 곧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 금지를 뜻한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부, KT 2.1GHz 용도 전환 허용할 듯”

“통신, 주파수 이미 충분”... “700MHz 방송용으로 이용해야”



KT가 요청한 2.1GHz 주파수 대역의 용도 전환이 이르면 9월 초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1GHz 주파수 대역의 용도 전환이 사실상 허용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700MHz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올해 초 요청한 2.1GHz 주파수 대역의 용도 전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르면 다음주 중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KT가 3세대(3G)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은 지난 2001년 3G 이동통신표준인 'IMT(DS)' 비동기식 기술용으로 할당받았다. 당시에는 4세대(4G) LTE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파

수의 사용 용도는 3G용으로만 한정했다.

KT는 “주파수의 사용 용도를 정할 당시에는 LTE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용도 전환 요청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KT는 2.1GHz 주파수 대역을 LTE로 전환해 현재 LTE용으로 사용 중인 1.8GHz, 900MHz 주파수 대역과 함께 ‘주파수 묶음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3밴드 CA는 LTE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연결, 대역폭을 넓혀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기본 LTE 보다 4배 빠른 최대 300Mbps 속도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KT의 이 같은 움직임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불공정 특혜라며 반발하

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지난 주파수 경매에서 1.8GHz의 인접대역이 아닌 2.6GHz 주파수를 선택했다면 3밴드 CA가 가능했는데 이를 포기하고 1.8GHz 주파수 대역을 선택한 만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KT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과거 SK텔레콤도 아날로그용으로 쓰던 800MHz 주파수 대역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고, LG유플러스도 1.8GHz 주파수 대역을 2.5G 서비스인 리비전A(Rev.A)로 변경한 적이 있어 KT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사실상 KT가 요청한 2.1GHz 주파수 대역의 용도 전환을 받아들일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면에 계속

백선하 baek@kobeta.com

1면에 이어▶ SBS 관계자는 “(분산 송신 기술을 적용한다는 가정 아래) 현 DTV 대역에서 UHD 방송을 하기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송·중계소 장비를 분산 송·중계기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하고, 전국 단위의 채널 재배치도 필요하다”며 “이 경우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채널 재배치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시청자들이 동일한 불편을 또다시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다. 전국 단위의 송·중계소 장비 교체에 약 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채널 재배치에

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표준으로 채택된다는 가정 하에 지적된 부분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ATSC 방식에서 SFN 적용을 통한 주파수 효율화의 가능성은 무척 낮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지상파 UHD 방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없이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실행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종합편성채널의 모기업 신문사들 그리고 통신 마피아인 ‘통파아’ 등이 합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700MHz 대역 주파수와 지상파 UHD 방송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IPTV 가입자 1000만 시대

유료 방송 업계 양대 산맥으로 급부상

저가 구조 탈피 시급

가입자 1000만 명을 넘어선 IPTV가 케이블 방송과 함께 유료 방송 업계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IPTV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여전히 부각되지 않고 있어 IPTV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코디마)는 8월 16일자로 IPTV 3사 가입자를 집계한 결과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KT가 548만 명, SK브로드밴드가 250만 명, LG유플러스가 202만 명으로 지난 2009년 IPTV 서비스 도입 이후 5년 8개월 만의 성과다.

KT 관계자는 “2009년 10월 IPTV 서비스 시작 이후 2012년 4월에 5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첫 500만 시간보다 약 1년여를 앞당겨 10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주문형 비디오(VOD) 등 언제든지 원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입자 증가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양적 성장과 달리 방송·통신 융합 상품인 IPTV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케이블 방송의 PP가 겹쳐 IPTV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결합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T-커머스 등의 양방향

콘텐츠가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역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한 일각에서는 IPTV의 양적인 성장도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했다기 보다는 기존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이 이동한 경우가 더 많아 유료 방송 산업의 성장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올해 6월 기준 케이블 93개사의 시청점유율(아날로그+디지털 합산)이 1년 새 61.14%에서 56.3%로 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며 케이블의 하락폭이 IPTV 증가분에 반영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인 IPTV 사업자들이 유선 결합(인터넷+TV+전화) 상품에 6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결합 상품을 강화하면서 케이블 가입자들이 IPTV 상품으로 갈아탔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결합 상품으로 인한 저가 요금 구조의 고착화가 콘텐츠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선순환적인 유료 방송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이다.

IPTV 최대 사업자인 KT 측은 최근 실적발표 자리에서 “단독 IPTV만 보면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콘텐츠 공급 비용 부담으로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나친 저가 요금 정책 때문에 콘텐츠의 질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000만 가입자를 달성한 지금부터라도 IPTV 사업자들이 저가 요금 구조를 탈피해 하루빨리 IPTV만의 독창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IPTV 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다음 - 카카오 합병 승인

“포털-모바일 시장 판도에 커다란 영향 미칠 것”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계약 체결이 양사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8월 27일 제2차 다음 본사와 판교 유스페이스에서 각각 임시 주주 총회를 열고, 합병 계약 체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 총회는 양사 합병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로, 양사 모두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통합법인인 다음카카오는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현재 시장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다. 다음카카오의 시가 총액이 1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 네이버가 주도해 온 포털과 모바일 시장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네이버에서 비해 모바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었는데 모바일 영역에

서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와 합병한다면 다음은 그동안 겪어온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고, 모바일 메신저 업계 1위인 카카오 역시 게임 외에 별다른 수익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다른 (긍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특히 라인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카카오가 다음의 콘텐츠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다음카카오의 성장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주주 총회에서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남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 사외 이사도 선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김범수 (썬)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선임됐으며, 새 사외이사로는 조민식 삼성 KPMG 본부장, 최재홍 원주대학교 교수, 피아오 안리 텐센트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에 따라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와 최준호 연세대학교 부교수(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조민식 본부장과 최재홍 교수, 최준호 부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한다.

이외에 이사 보수의 한도 변경도 승인됐다. 하지만 상호 변경, 사업 목적 추가, 수권 한도(발행주식의 한도)의 증가,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안건은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합병법인의 사명은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유지되고, 오는 10월 말 임시 주주 총회를 통해 ‘다음카카오’로 변경할 예정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광고 총량제, 프로그램별로 변경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광고 총량제 기준을 시간당에서 프로그램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8월 19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청으로 진행된 한국IT리더스포럼 8월 조찬 강연에서 “현재 시간당 광고 총량제는 시간 단위로 광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 60분 이상의 프로그램 경우 광고 시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시간당 광고 총량제를 프로그램별 총량제로 바꾸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재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고 총량제는 광고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종류, 횟수, 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유료 방송은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횟수, 시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방통위가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상파방송의 광고 총량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유료 방송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료 방송은 광고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 시간 최대 12분 이상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당 총량제를 실시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광고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져도 광고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90분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는 평균 10분, 최대 12분의 광

고밖에 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당으로 기준이 변경된다면 광고 시간이 15분으로 늘어난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 스포츠 중계방송에만 가능한 가상 광고를 오락이나 일부 교양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유료 방송의 간접 광고를 늘릴 계획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가상 광고는 운동 경기뿐 아니라 오락, 시사토론이 아닌 교양 프로그램에 적용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유료 방송은 100분의 5 이내로 간접 광고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상파방송 광고 총량제 허용에 뒤이어 광고 총량제 기준 변경, 유료 방송의 간접 광고 증대 등 방통위의 잇따른 규제 완화 방침은 지상파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유료 방송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고 총량제 허용 자체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지상파방송에만 엄격하게 적용된 광고 규제를 일정 정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유료 방송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통위는 광고 총량제로 방송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광고 총량제만으로는 지상파 방송의 수익이 나아질 수 없다. 그나마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되어야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다”며 “유료 방송 업계가 왜 반발을 하는지,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방통위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기반으로 어떠한 돌파구를 제시할지 향후 광고 규제 완화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진병 jnb1001@kobeta.com

최민희, “700MHz 주파수 정책 원점 재검토 약속지켜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오락가락 행보 지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8월 27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주파수 정책은 국가 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하는데 원칙과 소신이 명확해야 할 법관 출신의 위원장이 원칙도, 정책적 판단도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는 것에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공익적으로 쓰려면 그 중 일부를 이동통신용이 아닌 차세대 방송용으로 이용해 지상파 DMB를 재난 방송 등에 더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700MHz 대역 주파수 중 일부만 이용하더라도 LTE 통신망과 칩셋, 안테나 신호가 인접 주파수에서 통일되면서 단말기 경량화에도 도움이 되고, 중계망 구성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어 서비스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학계에서도 “지상파 DMB는 일종의 무료 보편 서비스로 활용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

고 있다. 일본에도 지상파 DMB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참고한다면 지상파 DMB 시장이 다시 한 번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상파 DMB 시장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화질 문제 개선과 정치권의 지지 속에 다시 한 번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김민정 mjkang@kobeta.com

고 있다. 일본에도 지상파 DMB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참고한다면 지상파 DMB 시장이 다시 한 번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상파 DMB 시장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화질 문제 개선과 정치권의 지지 속에 다시 한 번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3D 영상 눈 피로도 측정법, 국제표준 된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3차원(3D) 입체 영상에 대한 눈 피로도 평가 방법이 국제표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말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표준화기관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이하 IEEE)로부터 3D 입체 영상에 대한 눈 피로도 평가 방법이 표준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8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3D 입체 영상 눈의 피로도 평가 방법은 이상훈 연세대 교수가 리더

를 맡고,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IEEE 실무 그룹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청각, 시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활용해 3D 입체 영상을 평가한다. 3D 입체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태블릿 PC 등으로 바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종일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전자기술위원회

(IEC)의 공적표준화 활동에 못지않게, 정보 통신 융합 기술의 표준 선점을 위해서는 IEEE 등 시장 중심의 민간표준화기구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표원은 IEEE에 구축된 3D 영상 표준화 그룹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적재산권 확보와 함께 향후 기술 로열티 수입 창출이 가능한 표준특허 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Photo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13일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 송도복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역 시청자의 방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2월 인천광역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복합문화센터 내 지상 3~4층, 총 1,973㎡(약 596평) 규모에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7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 구축 공사를 완료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olleh kt

3면에 이어▶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구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한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용도를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했으나 미래부와 통신업계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 위원장의 발언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래부가 KT의 용도 전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미래부와 통신업계의 ‘정책 일관성’ 주장은 명분 없는 주장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각에서는 통신 3사가 확보한 주파수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확보한 주파수를 먼저 사용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용도 전환을 요청해 주파수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통신 전문가는 “통신이 확보하고 있

는 2.3GHz 대역 주파수와 2.6GHz 대역 주파수만으로도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통신 업계는 2.1GHz 상위 대역은 일본이 위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2.6GHz 상위 대역 역시 일본이 N-STAR(위성통신)로 활용하고 있어 간섭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2.1GHz 상위 대역은 아직 일본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언제 사용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또 2.6GHz 상위 대역은 이미 2011년 방통위가 일본과 MOU를 맺어 전파 혼·간섭의 문제가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주파수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 업계에 꼭 필요한 필수 대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선 700MHz 대역 주파수가 필수적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감에 따라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논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700MHz 대역 주파수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미 충분한 주파수를 확보한 통신 사업자 중 누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2면에 이어▶ 앞서 종편 3사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MBN은 지난 2010년 11월 방통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콘텐츠 투자 계획 금액과 재방송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들 사업자의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각 방송사들은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2012년에 1575억~2196억 원, 2013년에 1609억~2322억 원의 금액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했어야 했지만, 계획 금액의 절반을 밑도는 금액만을 투자했다. 또 재방송 비율 역시 상한치의 2~3배에 달하는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들 사업자에게 사업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2012년과 2013년 투자 계획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송 비율을 준수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자 방통위는 올해 1월에 각 방송사에 3,750만 원, 총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각 방송사들은 재방송 비율이 초과된 이후에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

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장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편이 사업 승인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한 약속을 한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종편의 방송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방통위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방통위 헛발질이 행정법원의 종편 바주기 판결을 불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리숙한 방통위가 패소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각각의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콘텐츠 투자 계획 미이행에 대해서는 패소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방송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억지라 하더라도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세밀하게 법률 검토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8월 28일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종편의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3년 광고 매출, 지상파 줄고…종편 늘고

“방송 광고 시장에서 종편 영향력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지상파방송의 방송 광고 매출은 감소한 반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의 방송 광고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에 따르면 지난해 TV와 라디오, 지상파 DMB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의 광고 매출액은 2조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2012년 8.2%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조2,63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9.1% 성장세보다는 다소 약해졌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것은 종편이다. 종편의 지난해 매출액은 2천3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했다. 2012년 138.8%라는 경이적인 증가 기록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PP 광고 매출 가운데 종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2%에서 2012년 13.6%, 2013년 18.6%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광고 시장에서 중요도가 커졌다는 의미다.

KISDI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제조업체들의 국외 이전 등으로 국내 광고 시장의 파이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각 방송 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700MHz 주파수, 누가 더 절실할까



“700MHz 주파수, 유희 대역 아니야”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논의의 전제인 ‘700MHz 대역 주파수의 유희’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시청 해소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유희 대역으로 전제한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진행된 ‘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는 명제는 ‘유희’ 여부”라면서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문제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이 대역을 유희 대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으니 전제부터 다시 바로 잡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전파 자원의 활용 계획인 ‘주파수 분배표’에서 용도를 정한 제5단을 보면 700MHz 대역 주파수가 TV 방송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TV 방송용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주파수도 포함한다. 문제는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 교수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DTV 방송 대역 외에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무시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수신율은 여전히 낮고, 난시청 문제도 존재한다”며 애초부터 700MHz 대역 주파수는 유희 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높고 있는 대역’이 아니라 난시청 해소를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하는 주파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난시청 해소 당위성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난시청 해소의 당위성은 헌법과 개별 법률인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먼저 헌법에서는 ‘정보의 자유’, ‘알 권리’를 ‘언론의 자유’ 가운데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지상파방송이 바로 그 ‘최소한의 정보원’에 해당한다. 고 교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난시청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정보원에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난시청 해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1조의 ‘시청자의 권익 향상’ 부분과 제1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DTV 활성화를 고려해 지상파 방송사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보조금 개선을 신청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이른바 ‘높고 있는 대역’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그에 따른 ‘이동통신 할당론’ 등은 그 전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의 새로운 법적 해석에 대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다수 공감의 뜻을 표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정대 교수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 즉 사회 구성원이 객체가 아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고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국가 재난 안전망 활용 계획’이 위법성을 갖고 있다며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전파법 제6조 3은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리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주파수 분배표가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TV 방송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관리 방통위가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이 같은 정책 발표를 통해 해당 주파수의 이용 계획을 밝힌 것은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으로 위법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재난 안전망 활용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파법 제6조의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 계획을 밝히면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고 교수는 “미래부 장관이 오는 9월 관련 사항을 주파수심의위원회 안전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행정행위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700MHz 대역 주파수가 애초에 유희 대역이 아니고, 미래부의 주파수 활용 계획 발표 자체가 위법 행위인 만큼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선하 baek@kobeta.com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과 통신 업계 간 힘겨루기가 이제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신경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송과 통신이 각각 700MHz 주파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여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700MHz 주파수, 국제적 로밍 안돼”

국제적 조화를 위해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통신 업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700MHz, 공공대역 설정의 필요성’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통신이 국제적 조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APT 플랜과 다르게 먼저 배분했고, 부분적인 조화가 가능한 유럽도 2020년 이후에나 결론이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은 우리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그나마 일본과 맞는데 일본마저도 완벽하게 APT 플랜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완전한 국제적 조화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통신 업계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694~79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주파수 활용 대역이 유사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APT-700 규약 이른바 APT 플랜(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APT 플랜을 주장하고 있고,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APT 플랜의 일부를 적용한 것이다)을 제정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어떻게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세부 계획까지 정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적 조화를 고려해 우리나라 역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통신 업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WRC-12에서는 아시아권이 속한 Region1에 한해 방송용으로 할당된 700MHz 대역 용도에 이동통신용이 추가 지정 제기되었고, 허용 여부는 WRC-15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한 상태가 아니고, Region1의 허용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교수는 “Region2에 해당하는 미국이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난데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핵심으로 주도한 APT 플랜과는 전혀 다른 계획 즉 재난 통신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AT&T와 버라이즌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분할 할당받았으나 미국 내 두 사업자 간의 단말기도 호환이 불가하다. 로밍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로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주도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이동통신 할당을 주장하고 있고, 유럽의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유럽의회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이동통신 할당을 결정하더라도 주파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이전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2년~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유럽 내에서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의회가 승인을 하더라도 로밍이 가능한 시기는 2025년 이후이고, 이마저도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며 통신 업계가 주장하는 국제적 조화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와 주도적으로 APT 플

랜을 발표한 일본마저도 APT 플랜에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700MHz 대역 주파수 가운데 10MHz 폭을 ITS용으로 배분했는데 APT 플랜에서 다운로드용으로 제시한 부분과 충돌한다. 또한 일본은 이동통신사업자가 4곳이 있는데 700MHz 대역 주파수 60MHz 폭을 3개사가 각각 20MHz 폭씩 할당받았고, 나머지 한 곳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한 사업자는 국제 로밍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로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것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APT 플랜에 부합되게 해놨는데 사실상 국제적 로밍으로 쓸 수 있는 대역은 없다”면서 “통신 업계가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신 전문가들 역시 국제적 로밍 주파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아닌 1.8GHz 대역이나 2.6GHz 대역 주파수가 유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기존 망으로는 신호가 약한 기지국 도달 반경 가장자리(엣지) 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분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난시청 해소를 위해선 700MHz 대역 주파수가 필수적이다. 이 교수도 이 부분에 공감을 표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 중 재난 통신용으로 20MHz 폭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대역은 UHD 방송용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한 뒤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일부 국제적 조화가 가능한 시점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납하는 주파수를 이동통신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특별 세미나에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 역시 이 교수의 제안에 동의했다.

특히 이상진 SBS 정책팀 차장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의 주파수를 확보한 이동통신사들이 왜 굳이 700MHz 대역 54MHz 폭에 급급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한 뒤 “영국의 자문보고서를 보면 2022년 이후에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물어 이동통신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겠다고 나와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UHD 방송을 진행한 후 기존 HD 방송을 UHD로 전환한 뒤 주파수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집을 개조하려면 살던 사람이 나가서 잠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듯이”라면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이용을 주장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국제적 조화를 강조했던 통신 업계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700MHz 대역 주파수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미 충분한 주파수를 확보한 이동통신사업자 중 누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게 될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미래부와 방통위의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으로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BIRTV 2014, 가능성이 현실되다

박종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처장



CCBN과 함께 중국의 2대 방송 장비 전시회인 BIRTV(Beijing International Radio, TV & Film Exhibition)는 세계적 수준의 NAB나 IBC와 비교하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계 방송 기술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고 중국의 방송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시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경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CIEC)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5만평 규모의 8개 전시홀에 약 50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했으며 5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관하였다.

8개의 전시홀은 영화 관련 장비, 중국산 장비, 송출 장비, 국제 업체 장비, 뉴미디어 업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특별히 느낀 것은 중국 업체와 유수의 국제 업체의 합작 생산되는 장비를 국가와 방송사가 전격 지원하여 중국 내 업체의 방송 기술력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 내 시장이 커서 국내 시장만 확보하더라도 업체는 성장할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도심 거리의 넘쳐나는 외국 유명 브랜드와의 합작 자동차에서도 보듯 중국은 어떠한 것이든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2014 BIRTV에서의 이슈는 중국 18대 삼중전화(우리나라 당대표회의와 비슷)에서 기존 방송국과 같은 전통 매체와 새로운 플랫폼 방송국으로 대표되는 신종 매체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등 올해를 TV 매체의 혁신년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업체에선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전 하에 새로운 방송 TV 서비스를 추진하여 IPTV와 빅데이터 서비스로 방송 사업에 새로운 기술과 상업의 형태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4K, OVP(Online Video Platform: 인터넷환경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IP 네트워크, 다채널 등도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며 다양한 서비스와 구축 사례를 전시하고 있었다.

KOBA 전시회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시해왔던 스튜디오를 BIRTV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주최 측은 현장에서 관람자에게 방송국 제작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KOBA 전시회가 얼마나 앞선 전시회인가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전체 맵을 달라고 하니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등 여러 곳에서 운영의 미숙함도 엿보였다.

하지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방송 기술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또한 전 세계 방송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



디지털 방송 기술의 길잡이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02-3219-5635 / 팩스: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동정



한국방송기술연합회 방송기술인상 시상식이 9월 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5층에서 열렸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주파수 배치와 지상파 UHD, 정부가 답해야 할 것들

칼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최근 방송가의 주요 이슈는 지상파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와 주파수 재배치 및 지상파 UHD 실시 여부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 정책 기관인 방통위와 미래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 발표나 언급이 있었기도 했지만,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련 주제에 대해 학회의 토론회라도 하나 개최되면 지상파방송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에서 이를 전달할 뿐 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하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한다.

8월 22일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두고 미래부는 위법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언론들이 감론을박 중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 쉽게 단정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다만 주파수 배치와 지상파 UHD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보면서,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들이 그냥 지나쳐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지을 수 없다.

먼저, 국가재난망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다. 국가재난망은 세월호 사건 이후 조기 도입 논의가 등장했고, 급기야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망을 조속히 결론짓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정부 부처는 700MHz 대역 가운데 20MHz를 국가재난망으로 할당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의 비극적인 참사가 국가재난망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인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

고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동안은 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입해야겠지만, 2002년과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2003년에도 제기된 국가재난망 논의는 왜 중단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나 설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왜 700MHz 대역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재난망 주파수로 사용 가능한 대역은 700MHz 외에도 1.8GHz, 2.6GHz 대역이 있다. 물론 700MHz가 황금 대역으로 불리는 양질의 주파수이며, 이 대역이 아닐 경우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700MHz 대역을 놓고 방송사와 통신사 간의 갈등이 첨예한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서 손가락을 얹어야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최선일까? 여전히 드는 의문이다.

모든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의 UHD는 언제 실현될 수 있는가? 정부가 갖고 있는 로드맵은 무엇인가? 세계는 4K를 넘어 8K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인가?

셋째, 왜 주파수를 별도로 배치하는 자기방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재난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점화되면서 재난망은 자기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의 통신망을 활용하는 상용망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각각의 주장은 나름의 논거와 각 주장에 적합한 해외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역시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주장의 장단점에 대한 조사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각 재난 관련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망을 연동하고 부족한 부분은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최적의 선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 역시 “현재 무선통신용 주파수 수요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제반 여건을 보면 재난망은 기존 재난망들을 연동하고,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나 근거 없이 자가망으로 확정해 버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야당 조차도 별도의 조사나 문제 제기 없이 수용해 버린 듯하다.

즉, 재난망의 필요성과 700MHz 대역 배정의 타당성, 자기망과 상용망의 장단점과 적합성 등 정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오롯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직진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지상파 UHD-TV의 실현은 또 다시 멀게만 보인다. 최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옛 방통위가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 폭을 포함해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별 다른 진전이 없다. 이는 통신사에게 배정된 40MHz에 대한 재검토가 요원해 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국가재난망까지 20MHz가 배정되면 지상파방송의 UHD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상파 UHD를 위해서는 6MHz 정도가 필요한데, 최소 5개 채널만 하더라도 30MHz가 필요하며, 지역 방송의 문제, 인접 주파수 문제가 있어 남은 48MHz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존 통신망의 배정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일단 이러한 의문들이 좀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기술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수용자 측면, 객관적인 해외 사례 등 다양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근거가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대한 쉽고 친절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을 희망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UHD는 언제 실현될 수 있는가? 정부가 갖고 있는 로드맵은 무엇인가? 세계는 4K를 넘어 8K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고 말 것인가? 이 역시 정부가 답해주기를 희망한다.

사설

최성준 방통위원장, ‘오락가락’ 행보 끝내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우선 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한 40MHz 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용도를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최 위원장이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700MHz 대역 주파수 중 일부를 지상파 UHD 방송에 할당해 주파수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8월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700M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사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지난달과 상충된 발언을 내놓았다.

물론 당시 최 위원장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들은 바 있다”는 발언 뒤 “7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새로운 주파수로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왜곡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8월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신에 배정된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은 가능한 건드리지 않고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방통위의 역할”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던 최 위원장이 어느 순간부터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기회주의적 자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이 ‘말 바꾸기’를 시작한 시점이 7월 28일 발언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박을 한 이후부터라며 미래부와 종합편성채널의 모기업 신문사를 그리고 통신 마피아인 ‘통피아’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떠밀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최 위원장 그리고 방통위가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당장 폐기하고, 재난망과 지상파 UHD 방송으로 이용함으로써 700MHz 대역 주파수를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마지막이다. 최 위원장과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온전히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이호삼
편집주간 | 이성의
편집위원 | 백낙운, 이승호, 안창준,
최권용, 나경록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전&화성프린원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홈페이지 | www.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 kobeta@naver.com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터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Next!!

KOBASHOW 2015



25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5.05.19-22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ufi
Approved
Event

산업통상자원부